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쏙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과징금·과태료 전환
-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강화
-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연내 마련·발표(우선 추진과제 9월 정기국회 제출)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 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수)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1일(금) 15:00에 개최하였다.

<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5.8.1.(금) 15:00~16:00,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
- ▶ (참석자) 기재부·법무부 차관, 공정위·국토부·해수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부·농식품부·행안부·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1급, 법제연구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내 개선과제를 마련하면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선과제가 신속하게 입법되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박헌진	(044-215-4634)
		담당자	사무관	김한필	(kimhanpil@korea.kr)
			사무관	박성우	(psw4512@korea.kr)
			주무관	전익수	(iksu1701@korea.kr)
담당 부서	법무부 상사법무과	책임자	과 장	김봉진	(02-2110-3167)
		담당자	검 사	박광호	(khpark@spo.go.kr)

참고 1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국민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 사업주에게는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형벌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그제(7.30(수)) 대통령께서도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고, 1년 내 쏠 부처 경제형벌 중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 이에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여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나가겠습니다.
 - 우선 1년 내 쏠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 더불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 기업의 위반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한편,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중심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연내 마련·발표하겠습니다.
- 경제단체, 기업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타게팅하여 집중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와 관련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여 현장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개선과제가 신속히 입법되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부터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 1차로 연내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발표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 2차로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어서 법무부 차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2

법무부 차관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입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 그 과정에서 법률과 제도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를 두고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이 중심에 있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 기업 활동의 내용을 ‘형벌’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기업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도전 정신을 위축시키고, 형벌의 본래 목적마저 흐리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물론, 법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경제질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 그러나 규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였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이번 TF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실무상 과잉규제로 작용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입니다.
- 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에 있어서도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번 논의 과정에서 그 동안 기업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은 정비하고,
기업들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서는
형벌이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할 것입니다.
-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TF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책임감 있게 논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TF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